

숙련인력 비중 높은 광주·전남 청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제조업·자동차·에너지 등 경험 축적이 경쟁력 이어지는 산업 구조 직장인 74% “정년 연장 필요”...20·30대 인식 전환 과반 이상 지지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조건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자동차·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숙련 기술 인력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경험 축적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대표적 ‘세대 갈등’ 원인으로 꼽혀 온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제계의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비즈니스 네

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엔컴퍼니가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협행 유지(12.9%)’나 ‘정년 폐지(13.1%)’ 의견을 크게 앞섰다.

직장인 다수가 현행 제도 변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67.9%, 30대 70.4%가 찬성을 밝히며 정년 연장을 기성세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미

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코 앞으로 다가온 50대(77.9%), 60대(80.8%)는 물론 미래 노동 시장 주체인 청년층까지 동조하며 정년 연장 논의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

적정 정년에 대한 의견 또한 ‘만 63~65세’가 60.2%로 가장 높았다. 연장 필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39.0%),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17.8%)이 가장 많아 경제 구조 변화와 불안정한 소득 환경이 세대 공통의 고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별 견해차가 드러났다.

20대는 ‘성과·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28.6%)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공정성을 강조한 반면 40대(27.2%)와 50대(27.4%)는 ‘고령 인력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제시했다. 모든 세대의 의견을 합치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임금·교육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과제를 드러낸 셈이다.

광주 역시 지역 일자리 기반이 약해지고 청년 인구 유출까지 심화하면서 고숙련 인력 유지와 세대 간 생산 협력 체계 구축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의 조치가 선행돼야만 고용

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공급(근무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것) 중심 체계를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연공급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급증과 조기 퇴직 확대, 청년층 진입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노사가 연공급 임금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한다”며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 특허 분쟁 ‘종지부’

분쟁 종결 협약...모든 소송 취하 양사 기술 존중하는 대승적 결단



2026. () 페어몬트 호텔에서 서울 호텔
성낙양(오른쪽) HS효성첨단소재 대표와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특허 분쟁 종료 협약을 맺고 있다. (HS효성 제공)

국내 석유화학 분야에서 경쟁해 온 두 대기업이 장기간 이어진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특허 분쟁을 종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와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사진>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상대 회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원칙 아래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합의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의 사업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타이어코드를 포함한 핵심 소재 분야에서 기술 차별화를 이어가며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HS효성첨단소재 역시 분쟁 종료를 계기로 미래 신소재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타이어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늘리고 신규 보장재 시장 개척에 집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1월 무역수지 8억 2000만 달러 흑자

반도체·기계류 등 수출 이끌어

올 1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8억 2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47억 4000만 달러, 수입은 3.5% 줄어든 39억 2000만 달러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29.4% 늘어 15억 달러, 수입은 36.9% 증가한 8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6억 9000만 달러 흑자였다.

반도체(67.1% ↑), 수송 장비(27.5% ↑) 등이 수출을 이끌었으며 가전제품(17.0% ↓)과 타이어(15.6% ↓), 기계류(2.3% ↓)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중남미(65.3% ↑), 동남아(56.9% ↑), 유럽연합(39.3% ↑), 중국(30.0% ↑) 등은 증가했고, 미국(8.3% ↓) 수출은 줄어들었다.

수입은 반도체(45.3% ↑), 가전제품(32.5% ↑), 기계류(1.6% ↑), 화공품(10.7% ↑), 기타 자본재(25.9% ↑) 등이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1.1% 줄어든 32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0.4% 감소한 31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억 3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에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88.3% ↑) 등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9% ↓), 수송 장비(47.1% ↓), 화공품(7.8% ↓), 철강 제품(4.9% ↓)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7.2% ↓), 동남아(8.7% ↓), 유럽연합(30.6% ↓), 중국(10.1% ↓), 일본(24.7% ↓) 등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석유제품(9.8% ↑), 기타 품목(6.1% ↑) 등이 증가했고 원유(17.6% ↓), 철광(3.3% ↓), 석탄(24.4% ↓), 화공품(17.5% ↓) 등은 감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조속 도입해야”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 시급”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상의는 18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망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라며 연내 제도와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회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있지만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

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손실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의회는 현재 송전 손실이 3~4% 수준에 이르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는 지역별 송전 거리와 계통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원가 기반 요금 체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요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등제가 도입되면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가 확고되고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조업 매출 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업종에 따라 3~20% 이상에 달하는 만큼 전기요금은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상의회는 반도체·화학·금속·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일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회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송전망 혼잡도와 지역 계통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차등 가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 분산과 계통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회는 또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선 기업이 제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80~185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10~15% 할인 폭을 적용해 150~160원 수준의 차등 체계를 마련해야 입지 이전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장거리 송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며 “연내 실행 로드맵 수립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설 끝나면 코스피 오른다? ... 10년 통계 반반

‘명절효과’ 통계적으로 확인 안돼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하면서 설 연휴 이후 증시가 오른다는 ‘명절 효과’의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설 연휴 직후 거래일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연도 수는 5회로 나타났으며, 하락 연도 수도 5회였다. 10년간 코스피는 설 연휴 직후 거래일 평균 0.10% 하락했다.

기간을 넓혀 봐도 흐름은 비슷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상승 연도 수는 5회, 하락 연도 수도 5회였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2년으로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3.96% 올랐다. 당시 설 연휴 직전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

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당시 코스피는 설 연휴 직전 5거래일간 6.03% 급락한 바 있다. 2024년 상승률이 2.29%로 두 번째로 컸으며, 2023년(1.25%), 2018년(1.23%), 2021년(0.23%) 등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0년으로,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5.67%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악재를 피하기 위해 연휴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가 연휴 이후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오른다는 이른바 ‘명절 효과’가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설 연휴 직후 코스피 상승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연휴 기간 발표되는 해외 주요 경제 지표와 대외 이벤트가 시장 방향을 좌우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명절 전 이틀간 소상공인에 2500억원 지급

중기부 바우처 173만건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설 명절 전 빠르게 지원되면서 ‘소상공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의 75.2%(230만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3일째인 지난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해 12일까지 100만명에 25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할 수 있다.

설 명절 전 신속하게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폐업 시름을 덜었다”, “명절 때 돈 쓸일이 많은데 가스비라도 아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대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 14개월만에 4%대

은행권의 신용대출 최저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뚝뚝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5000 돌파로 ‘빛부’ (증권사·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투자) 열풍이 거센 상황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새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직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이다.

2024년 12월 이후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하단은 줄곧 3%대를 유지하다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4.360~6.437%) 하·상단도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0.107%p)과 함께 각 0.230%p, 0.140%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30~5.731%) 역시 지표인 코픽스(COPIX-2.890%)에 변화가 없는데도 0.1%p 가까이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



삼성전자,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6’ 참가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인 ‘KBIS 2026’ 방문객들이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시가전’과 ‘라식리 빌트인’ ‘데이코’ 라인업을 구경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대출 자영업자 5% 채무불이행

최근 5년새 3배 이상 늘어나

내수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5%에 해당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0년 말 기준 5만1045명에서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차주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로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